

(동정) 김명자 환경부장관

김명자(金明子) 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월 2일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재활용품 매장 '아름다운 가게'에서 1일 점원으로 일했다.

제5회 환경전문기자회 정기세미나 개최

환경전문기자회(회장 박성열)는 지난 11월 8일에서 9일 양일간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제5회 환경전문기자회 정기세미나 및 생태탐방 행사를 실시했다.

환경부와 서산시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환경기자 30여명이 참석해 '서해안 통과 철새도래 실태', '천수만의 철새 및 기행전'에 관해 국립환경연구원 이정연 연구사, 김현태 만리포고등학교 교사, 서산시 환경보호과 노상근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기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환경전문지 및 기자의 발전방향 토론회를 가졌다.

류재근 환경기술진흥원장은 "환경전문 기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며, "전문가다운 프로의식 배양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하고,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환경전문기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 환경자원행정 종합평가 실시

경기도는 최근 도내 31개 시·군에 대해 환경자원행정 종합평가를 실시, 우수 시·군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중점 평가분야는 ▲쓰레기 종량제 개선 및 청소행정 ▲청결유지 책임제 운영,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음식쓰레기 감량화 추진 ▲환

경자원 관련 우수시책 등이다.

도는 최우수 1개 시·군에 8천만원, 우수 3개 시·군에 각 5천만원, 장려 3개 시·군에 각 4천만원을 지원한다.

전경련, 환경조사 삼진아웃제 도입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0월 22일 환경분야 조사와 관련해 지도 및 점검횟수가 많아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중복·과잉조사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환경분야 조사의 실태와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지도·단속기관의 일원화, 적발위주의 점검보다는 지도·개선 위주의 전환, 삼진아웃제 도입, 점검예고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지도·단속기관이 환경부, 시·도, 검찰, 경찰, 합동단속 등으로 다원화된 것을 환경부 또는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합동단속시 자료 제출기관이나 점검사항의 실질적인 일원화를 통해 기업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위반사항의 적발보다는 지도·개선에 주안점을 뒀던 두번은 개선 및 교육기회를 주고 세번째는 처벌하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사고와 같은 긴급한 사안이 아닌 경우 안전이나 소방분야와 같이 점검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이 최근 39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자치단체, 지방환경관리청 등의 환경조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체당 연평균 17.4회, 기간은 평균 16.6일씩 환경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